



한파 속 철새는 날아가고... 광주·전남지역에 매서운 한파가 몰아친 8일, 담양의 한 저수지에 천연기념물 제327호인 원앙들이 먹이를 찾기위해 수면 위를 낮게 날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조합장 선거 두달 앞...물밑은 벌써 ‘후끈’

농·축·수협, 산림조합 첫 동시선거...광주·전남 199명 선출

출마 예정자들 속속 공직 사퇴...일부에선 혼탁·과열 조짐도

농·축·수협 그리고 산림조합장을 뽑는 동시 선거(3월11일)를 60여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이 선거규정에 따라 속속 공직에서 시작하는 등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관련기사 2면> 8일 광주시·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농협 등에 따르면 내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위해 조합 임·직원 10여명이 공직에서 물러나는 등 선거 출마 대열에 합류했고, 그 외 예비 후보자도 물밑에서 출마 의사를 타진하는 등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

르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 200여명의 조합장을 선출하게 된다. 광주는 농·축협 16곳, 산림조합 1곳 등 모두 17곳, 전남에서는 농·축협 147곳, 수협 17곳, 산림조합 19곳 등 모두 183곳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유권자는 광주·전남을 합쳐 47만 명이 넘을 전망이다. 입후보자는 5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명선거 바람과는 달리 벌써부터 불

■ 농·수·축협, 산림조합장 선거 일정

	광주	전남
선거	17곳	182곳
입후보자(예상)	50여명	500여명
유권자(추산)	3만2000명	44만명
· 선거일	3월 11일	
· 후보등록	2월 24일·25일	
· 선거운동	2월 26일~3월 10일	
· 투표시간	오전 7시~오후 5시	

법·혼탁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광양 A농협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B씨는 해당 조합원 3명에게 5만원 상당의 농협상품권을 건네다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등 혼탁 선거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장흥 모 조합에서는 선거와 관련 보복성 인사조치와 형사고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동시에 선거 관리기관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시·도 선관위는 법적으로 의무위탁이 시작된 지난 9월부터 기부행위를 단속하는 등 선거체제에 돌입한 상태이며

연초 보답대회 등을 틈타 위법행위가 판칠 것에 대비해 지원인력을 확보하고 선거관련 정보수집과 단속에 나섰다. 경찰도 ‘선거사범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철저한 단속과 사법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많은 선거구를 가진 농협도 이번 선거와 관련해 ‘범 위반’조합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등 선거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위법행위가 발생한 조합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력 제재키로 했다.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는 자체적으로 홈페이지에 부정선거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신고포상금도 1억원으로 올렸다.

농협광주지역본부 관계자는 “처음으로 전국 동시에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인 만큼 깨끗하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선거 안내서를 통해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발생할 수 있는 위법사항에 대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정홍=김용기 중부취재본부장 kykim@

혁신도시 공공기관 채용 지역 대학생에 문 넓힌다

정부, 경영평가에 반영

나주의 빛가람도시를 비롯한 혁신도시의 대학생들이 지역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문이 넓어진다. 혁신도시 지역 대학생들의 취업난을 완화하면서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안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내로 지난해 확정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들어갈 정부권장정책의 하나로 이런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간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평가방식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달 중순께 관계부처가 모여 혁신도시 대학생들의 고용에 따른 가중치 부여 등 평가기준을 세부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방침은 이미 정부 안으로 마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3일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혁신도시 등에서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지만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해당 지역 대학생 채용 실적을 공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법률적 근거는 충분하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 특별법’에서도 혁신도시 공공기관은 지역 대학생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 혁신도시의 지역 인재 채용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운덕 의원이 지난해 10월 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 75개의 신규 채용 시 지역인재 비중은 2012년 2.8%, 2013년 5%, 2014년(7월 말 기준) 6.8%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평가 기준을 마련해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혁신도시의 규모에 따라 대학교 수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채용 혜택을 주는 지역 법위를 설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법’ 등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의 대학생 선발 시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기존 규정과 겹치지 않는 선에서 지역 법위를 설정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d@연합뉴스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공직자·교직원 등 형사처벌

여야 ‘김영란법’ 합의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공직자의 금품수수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 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8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열고 논란 끝에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중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해충돌 방지 부분을 배제하고 금품수수 금지와 공직자의 부정청탁 금지 부분만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 제정안’으로 명칭을 변경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추후 보완해 입법할 방침이다. 제정안은 공직자와 그 가족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금지하기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과 기준 등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토록 했다.

그동안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법 적용대상은 당초 정부 입법안에서 정한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립학교 임직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언론사 종사자로 확대해 적용된다.

정무위는 오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이 법을 심의한 뒤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내일 오후 2시 송흥민이 뜬다
아시안컵 오만전 ▶20면





새로운 모험의 시작

The New GLA-Class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주)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번지 / Tel. 062)226-0001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GLA 200 CDI 2,143cc 1,580kg, 7G-DCT 복합연비 16.2km/t (도시연비: 14.3km/t, 고속도로연비: 19.5km/t), 1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20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